

광주·전남경찰, 20분거리 8분에... '번개 이송작전'

2026수능

“수험생 태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광주·전남 거리 곳곳에서 경찰의 ‘수험생 이송 작전’이 펼쳐졌다.
이날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수험생 이송 지원 등 관련 신고 접수는 총 22건(광주 17건·전남 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6분께 광산구 보문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울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했다.
“성덕고로 가야하는데 보문고로 잘못 찾아왔다”는 수험생의 대답에 무전으로 순찰차를 호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2시험장(서석고등학교)에서 교통순찰차를 타고 온 한 수험생이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광장 수험생을 태운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신속 수송에 나섰다. 평소 20여분이 걸리는 성덕고까지 약 9km를 8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입실 마감 6분을 남기고 수험생을 무사히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
앞서 오전 7시50분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한 수험생이 정시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긴급한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사이드카를 투입, 순찰차를 호위하며 막힌 길을 뚫고 시험장인 동신여고까지 바래다줬다.

시험장 착각·지각 위기 등 도움 요청에 긴급 수송

신분증부터 도시락 수송 등 광주 17건·전남 5건

시10분까지 도심 곳곳에 각 일선경찰서 교통안전계와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직원과 모범운전자회 봉사자 등 총 386명을 배치, 특별 교통관리를 펼쳤다.
이날 광주경찰청은 수험생 13명을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챙기지 못한 수험생 4명에 도움을 줬다.
전남에서도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7분께 시험장을 착각해 목표제일여고로 잘못 찾아온 수험생을 위해 정명여고까지 5.2km 거리를 경찰 사이드카로 에스코트, 5분 만에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각 여수에서도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이 탄 차량을 사이드카 2대와 순찰차 1대가 막힌 길을 뚫어 마감 1분 전 간신히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고속도로순찰대도 이날 광주~대구선

광주방면 7.5km 지점에서 수험생 자녀를 위해 정성껏 썬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다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발을 동동 구르던 학부모를 광주 상일여고 시험장까지 수송했다.
전남경찰청은 교통·지역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총 353명을 배치해 시험장 주변 교통 안전 관리에 힘썼다. 전남경찰이 도움을 준 수험생과 학부모는 5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는 4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만7731명이, 전남은 46개 시험장에서 1만4952명이 시험을 치른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조8257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감소로 올해 2조8752억 원보다 495억 원(1.7%) 줄어든 규모다.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47억 원 늘어난 2조3102억 원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52억 원이 감소된 3470억 원, 기타 이전 및 자체 기금 1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50억 원, 내부거래(기금전입) 1175억 원 등이다.
광주시의 2026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중 100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엔 미전입된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광주시로부터 전출받아 2026년 9월 이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광주교육청 예산안 2조8257억원 편성... 전년비 1.7% 감액

세수감소·지자체 이전수입 등 495억 감액

시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가용 재원은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신규사업 억제, 유사 사업 통합, 소모성 경비 최소화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1조6806억 원, 운영비 2200억 원, 교육사업비 7039억 원, 광산구 신설 사업(2027년 3월 개교 예정) 등 시설사업비 1798억 원, 교육행정일반 414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10% 증액했으며,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원 장기 재직휴가 시 대체인

력 채용 등에 교당 50~100만 원을 편성했다.
2030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에 7억 원을 반영했으며, 신청사 건립기금에 200억 원을 적립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1270억 원, 늘봄학교 운영 등 220억 원을 반영했다. 아침·저녁 돌봄 유치원 운영 18억 원,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39억 원도 포함됐다.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유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

기지 않도록 꿈드림이 473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21억 원, 토·공유일 급식비 지원 25억 원,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10억 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2866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265억 원, 학내 전산망 구축 87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20억 원,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16억 원, AI 중점학교 운영 12억 원 등 AI 미래교육에 812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98억 원, 석면텍스 및 조영 교체 40억 원, 기계설비 개선과 방수공사 각각 117억 원, مطم한 화장실 105억 원, 냉난방 시설 153억 원 등 시설사업비 1798억 원을 편성했다. /염선호 기자

건설사 경영난에 전남 '초등학교 신축공사 중단'

무안 사랑초 공사 '스톱'... 공사대금 가압류·공기 지연

전남도교육청은 무안군 오룡지구 내 사랑초등학교(가칭) 신축공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학교는 공동도급사 2곳 중 A건설사의 채권가압류 등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가 이탈하면서 공기가 지연됐다.
이어 나머지 도급사인 B건설사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손을 놔 최근 전면 중단됐다.
B건설사는 전남도교육청에 A건설사와 계약 해지, 공사대금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랑초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만5000㎡ 부지에 37학급 규모로 건립 중이며,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 중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A건설사에 3차례에 걸쳐 가압류 해제와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A건설사가 오는 14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달청 조치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3월 개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6배 ↑

정다는 시의원 '의무기간 위반'... 부당수급 관리 강화 필요

광주지역 전기차 보조금 부당 수급이 4년 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의회 정다는(민주당·북구2)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 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8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가 2024년 적발 건수의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000만 원(4건)에서 2024년 1억 9000만원(118건)

으로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정보 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고,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생후 2개월 아이 숨지자 시신 방치' 20대 남녀 징역 7년 선고

법원 "사망 후에도 쓰레기 더미에 방치... 상응한 책임져야"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and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인인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모텔 방에 약 10일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아동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이후 시신을 쓰레기장 쌓인 곳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